

#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2006. 9

#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2006. 9

---

김 국 신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 영 호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 목 차

I. 문제제기 .....	1
II. 제6차 한·미 정상회담의 배경 .....	2
1. 한·미 정상회담과 6자회담 .....	2
2. 미국의 대북압박 강화와 북한의 대응 .....	5
3. 한·미동맹 재정립 추진 현황 .....	8
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현황 .....	10
III. 정상회담 합의 내용 분석 .....	12
1. 북핵 및 미사일 문제 .....	12
2.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	14
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	16
4.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 문제 .....	17
IV. 정책적 고려사항 .....	18

## I. 문제제기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9.19 공동성명'(2005.9.19) 도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은 2006.7.5 미사일 7발을 시험 발사하였으며 북·미관계는 더욱 경색되었음.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는 2006.7.15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1695호)를 채택
  
- 한·미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등 한·미동맹 재정립 문제를 둘러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위한 협상도 추진되고 있음.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FTA 체결문제로 한국사회 내 갈등 고조
  
-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워싱턴을 실무방문, 부시 대통령과 2006.9.14(미국 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등 한·미동맹문제, 한·미 FTA, 미국 비자 면제 등 양국 간 현안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이견을 조율함.
  - 회담 후 양국 정상은 '언론회동'(press availability)을 갖고 회담 결과를 설명
  
- 본 보고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배경을 검토하고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기자 회견 내용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II. 제6차 한·미 정상회담의 배경

### 1. 한·미 정상회담과 6자회담

-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6년 9월까지 여섯 번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간 견해 차이를 적극적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이 있었음.
  -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 이후 북핵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상정되었음.
  
- 2003.5.15 워싱턴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부시 대통령 간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이라는 합의가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함.
  -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제거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
  - 이후 2003.8.27~29 제1차 6자회담 개최
  
- 제1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003.10.20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안전을 문서로 보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힘.
  - 이후 제2차 6자회담(2004.2.25~28)이 개최되었으나, 북한은 제3차 6자회담(2004.6.23~26) 이후 협상을 거부하며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관망하는 자세를 보임.
  
- 부시 대통령 재선 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12차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은 2004.11.20 제3차 정상회담을 갖고 북

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함.

- 부시 대통령은 2기 행정부에서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문제”를 ‘사활적 이슈’(vital issue)로 다룰 것이라고 언급

○ 민주주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을 주요 정책목표로 내세운 부시 2기 행정부는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에 포함시켰으며, 이에 북한은 2005.2.10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및 핵무기 보유’를 선언함.

- 2005.3.31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 6자회담의 군축회담 주장

○ 노무현 대통령은 워싱턴을 실무방문, 2005.6.10 제4차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포함 한·미 현안을 논의함.

- 양국 정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다자안전보장, 에너지 포함 경제지원,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가능 등을 재확인
- 부시 대통령은 ‘북한 침공 또는 공격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하고, 언론 회견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Mr. 김정일”로 호칭

○ 이후 2005.7.9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2005.7.12 북핵 폐기 시 200만 kW 전력 직접송전을 골자로 하는 ‘대북 중대제안’을 발표함.

○ 2005.7.26 4차 6자회담이 13개월 만에 재개되었고, 2단계 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발표함.

- 평화적 방식의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의 포기과 이른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협정에 복귀,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논의

- 미국은 핵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 북·미 상호주권 존중 및 관계 정상화 조치 추진, 북·일 관계정상화 조치 추진, 에너지·교역·투자분야의 경제협력, 대북 에너지 제공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레짐 협상 추진 등

○ 한편, 미국 재무부는 4차 6자회담이 진행 중이던 2005년 9월 15일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를 북한의 위조지폐 유통 및 돈세탁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우선적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함.

○ 2005.11.9~11 열린 5차 6자회담에서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원칙을 확인하였으나 차기회담 일정 합의 없이 폐회됨.

- 북한은 5단계 해법(핵 실험 보류 → 핵 이전금지 → 핵물질 추가 생산금지 → 검증과 폐기 → NPT 복귀)을 제시하는 한편,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함.

○ 5차 6자회담 직후 부산 APEC회의를 계기로 경주에서 2005.11.17 제5차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함.

- 그러나 북한의 위폐제조 및 돈세탁문제로 인해 북·미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6자회담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짐.

## 2. 미국의 대북압박 강화와 북한의 대응

- 5차 6자회담 이후 북한은 ‘위폐제조 및 돈세탁’ 문제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위한 ‘조작’으로 주장하고,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가 6자회담 복귀를 위한 ‘근본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는 2006.1.30 위폐 관련자 처벌용의를 표명하였으나, 미국은 관련자 처벌과 공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위폐 동판 폐기 등의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주장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06.2.9 “국제적인 반자금 세척활동에 적극 합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미국과 북한은 2006.3.7 뉴욕에서 북한의 달러위조 및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양자접촉을 가졌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
  - 북측 대표 리근 국장은 위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간 협의기구 설치 등 4가지 해결방안 제시
  - 미국은 북한의 위폐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설협의체 제안 거부
- 그 후 미국은 ‘6자회담과 금융제재는 별개’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6자회담의 틀 내에 북·미관계 정상화와 금융제재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함.
  - 그러나 북한은 금융제재 해제를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제시
-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거부가 지속되면서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탈북자 접견, 일부 탈북자의 미국 망명 허용, 북한 인권문제 부각, 북한의 불법적인 국제금융거래 차단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함.

- 북한은 2006.7.5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 6기의 스커드·노동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고, 함경북도 화대군 대포동에서 대포동-Ⅱ호 미사일 1기를 발사하였으나 동 미사일 발사는 실패로 평가됨.
-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하여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 등 상황의 반전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나, 미국은 “즉각적 위협은 아니나 안보에 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함.
  - 일본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안 채택을 추진
-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7.15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 및 추가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대북 결의(169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함.
  - 유엔회원국들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미사일과 관련 물품·재료·제품·기술이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 미사일이나 관련 물품·재료·제품·기술을 북한에서 구매하지 않고, 북한의 미사일이나 WMD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며,
  - 북한에 전제 조건 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하고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말레이시아에서 2006.7.27~28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했음.
  - 미국은 10개국 외무장관회담을 주관하며 북한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북한은 이에 불참함.

- 스텐턴 레비 미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제재에 각국 은행이 잇따라 동참함으로써 북한을 재정적으로 거의 완전한 고립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발표(9.8)함.
  -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BDA)은행의 북한 계좌가 동결된 이후 중국·일본·베트남·몽골·싱가포르 등에서 약24개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거래를 파기하거나 종결
  - 세계 금융기관에 북한과의 거래 위험성에 유의할 것을 촉구
  
- 로버트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2002년 이후 예멘·리비아·파키스탄·이집트 등이 북한 미사일 구매를 중단하는 등 미국의 '북한 미사일 수출 차단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고 언급(9.6)함.
  - 미국은 현재 66개 회원국이 참여, 정보교환 및 훈련을 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하고 있음.
  
- 한편, 미국은 탄도미사일방어(MD)체제 실험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크기와 속도가 같은 표적미사일을 요격, 격추하는데 성공(9.1)함.
  
- 한·미 정상회담 직전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한·중·일을 순방(2006.9.5~12),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유엔안보리 대북결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함.
  - 힐 차관보의 대북제재 협조요청에 대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로이터통신 인터뷰(9.5)에서 대북제재 반대 입장 표명
  - 힐 차관보는 한국 방문 시 9월 중순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ARF에서 열린 '10자 회동'과 유사한 다자 외무장관회담 개최 방안을 제의(9.11)함.

### 3. 한·미동맹 재정립 추진 현황

- 2002년 12월 제3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을 연구하기 위한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함.
- 그 후 2003.4~2004.9 12차례 개최된 FOTA회의를 통하여 용산기지 이전 및 미 2사단 재배치, 10대 군사임무 전환, 연합군사능력 발전 등에 합의함.
  -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용산기지는 유엔사와 연합사를 포함하여 2008년 말까지 평택지역으로 이전
  - 미 2사단 재배치는 1단계로 2006년까지 한강 이북의 군소기지들을 동두천·의정부 지역으로 통합하고, 2단계로 한강 이북의 주요 부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 등
- 2004년 10월 제36차 SCM에서 FOTA회의 대신 ‘한·미 안보정책구상’(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이라는 새로운 회의체를 구성하여 동맹조정을 위한 3단계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함.
  - ① 한·미 양국이 직면한 안보상황에 대한 포괄적 공동평가,
  - ② 그에 기초해 동맹의 미래 공동비전을 설정한 후,
  - ③ 마지막 단계로 동맹비전에 맞춰 한·미 군사지휘관계 조정
- 2005년 2월 제1차 SPI 회의가 개최된 후 1~2단계의 공동연구가 마무리되자, 2005.9.28~30 제4차 SPI 회의에서 양측은 작전통제권에 관한 논의를 ‘적절히 가속화’하자는 데 입장을 같이함.
  -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 합참의장에게 환수되었음.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SPI에서 논의해온 동맹조정 3단계 연구의 마지막 단계
- 2005.10.21 제37차 SCM의 공동성명에는 ‘두 장관은 지휘관계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문구가 명시되었음.
- 그 후 한·미 양국은 다음의 4대 원칙 아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음.
  - 한·미 상호방위조약 유지
  - 주한미군의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 파견 보장
  -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 한반도 전쟁 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 등
- 한편, 2006년 1월 19일 한·미 전략회의(SCAP)의 ‘공동성명’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되,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덧붙였음.
- 미국측은 2006.7.13 서울에서 열린 제9차 SPI에서 2010년 안에 돌려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한국 정부는 그 동안 2012년을 목표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해왔음.
-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에 이양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8.27)되었음.

○ 2006.9.7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지속적인 역지력 및 전투준비태세가 보장된 상태로 지금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친 조직적인 활동, 훈련 및 연습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에 따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는 2006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SCM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임.

#### 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현황

○ 한·미 양국 정부는 2006.2.3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할 것을 공식 선언함.

- 2003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 수출대상국이 되었으나, 미국 시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의 비중이 높음.
- 중국 생산기지를 통한 대미 수출도 증가 추세
- 양국의 무역 구조와 인식 차이로 인한 통상 현안이 존재

○ 한·미 FTA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하여 양국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양국 간 통상 확대 이외에 다양한 정치·경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 미국의 제7위 교역상대국인 한국과 자유무역협상이 타결될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 이후 미국이 체결하는 최대 규모의 FTA가 됨.

○ 미국은 한·미 FTA를 한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시장접근을 확보하고 동북아지역에서의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국내 유입 해외자금의 주공급원이 되고 있음.

○ 한편, 한국은 안보 위주의 한·미동맹을 경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의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함.

○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음.

- 한·미 FTA 협정 추진과 관련 한국 사회 내 찬·반 갈등 고조

○ 미국 시애틀에서 2006.9.6~9 진행된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양측은 농산물·섬유·일반상품 등 3개 분야의 개방 폭을 확대기로 합의함.

- 그러나 농업과 섬유 부문의 관세 폐지, 무역 구제, 자동차 등 이해관계가 대립된 부문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함.

-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고수함.

○ 한·미 양국은 2006.10.23~27 제4차 협상에 앞서 양국 협상팀이 직접 만나거나 화상회의를 갖고 이견을 미리 조정해나가는 ‘막간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Ⅲ. 정상회담 합의 내용 분석

#### 1. 북핵 및 미사일 문제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 재확인>

- 한·미 정상은 양국이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해 나간다는 공통된 인식과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정상회담 전날 한·미 2+2(한국의 외교장관·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미국의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회담에서,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의 규탄 결의 지지와 대북 결의 1695호의 성실한 이행을 표명함.
-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거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틀이며, 이를 통해 평화적·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함.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마련>

- 노무현 대통령은 6자회담의 재개 및 진전을 위해 한·미 양국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common and broad approach)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
  - 다만, 양국 실무선에서 긴밀히 협의 중이며, 아직 완결되지 않았고 내용이 복잡하다고 언급
  -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한·미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6자회담 다른 참가국들과 추가적으로 협의해

만들도록 했고, 이에 대한 후속 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의 대북접근에서의 갈등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양국의 정책 조율을 통한 공동의 대북접근방안 마련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대북정책을 기대함.

#### <대북제재 문제>

-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6자회담 실패 가능성과 이에 따른 대북제재 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함.
- 또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북한에 제공키로 했던 쌀과 비료 지원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상 제재나 다를 바 없다”고 말함.
  - 미국의 대북제재는 (1695호에 입각한) 미국의 국내법 집행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라고 언급
- 반면, 대북유인책과 관련,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이 고립보다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길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이 지역의 안정이 북한주민들에게 혜택이 되고 식량을 제공받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함.
- 또한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의 6자회담 복귀 거부가 나머지 5개국의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한다면 분명히 보다 좋은 앞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이것이 6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전하는 메시지라고 강조

- 한국은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1695호)에 따른 각국의 정책 집행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포용적 접근 자세 지속의 신호를 보냄으로써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함.
- 미국은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과 함께 자국의 정책적 입장을 견지

## 2.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미래 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에 인식 공유>

-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은 “강력하고 사활적인 관계”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공약 강화에 논의는 한·미동맹이 극동의 안보와 평화에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함.
- 또한 부시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한반도 안보를 여전히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9월 13일 노무현 대통령 면담 시 한·미 관계의 미래상으로 ‘동맹의 현대화’를 제시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부시 대통령은 특히 그간 두 정상의 재임 기간 중 한·미 양국 간의 안보 동맹을 발전시키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결정들은 필요했던 것이었고, 서로 약속을 잘 지키면서 순조롭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도 만족을 표시했다”고 설명함.
  
- 한편, 양 정상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에 기대하는 역할, 한국이 보는 일본·중국·러시아와 미국이 보는 시각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그동안 한국은 한·미동맹을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과 협의해 왔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미관계를 새로운 안보환경에 부응하도록 발전시키자는데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평가됨.

####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환수(이양) 합의>

- 한·미 정상은 그동안 양국 국방 당국 간에 시기를 두고 논란이 되어 왔던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환수(이양) 원칙에 합의함.
  - 부시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 미국의 한반도 안보 공약 견지 위에서 이루어짐을 강조
  -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양국의 신뢰를 기초로 해서 미국의 주한미군 지속 주둔 및 유사시 증원 공약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발표
- 특히 한·미 양국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
- 이양 시기와 관련, 한·미 양국 대통령은 양국 실무진 간의 구체적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함.
  - 노무현 대통령은 향후 “실무적으로 합리적 조율을 통해서 양국 간에 적절하게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부시 대통령은 “적절한 수준의 (실무진이) 협의를 통해 적절하게 전작권의 적절한 이양이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

- 부시 대통령은 또한 “주한미군 병력의 규모와 배치 시기와 같은 문제는 한국정부와 협의를 해 결론을 내릴 것이며”, “양국의 실무자들이 적절한 협의를 해서 적절한 시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환수원칙이 합의되고, 그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 문제들은 양국 실무진 협의로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관한 논의는 향후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실무적 수준의 협의·결정 사항으로 남게 됨.
  - 2006년 10월 개최될 제38차 SCM에서 시기 등이 협의·결정될 것으로 예상

### 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 양국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양국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양국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함.
-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노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시간보다도 내용을 중시해 협상을 하지만 가급적 빨리 촉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부연 설명함.
- 한·미 FTA 체결문제는 한·미 양국, 특히 한국 사회 내에서 찬·반의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내용을 중시하되 협상을 촉진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 정부 간의 FTA 체결 추진 의지가 재확인됨.

#### 4.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 문제

- 부시 대통령은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할 경우 양국 간 교류 및 상호 이해를 증대를 통해 한·미관계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다며 한국의 이 프로그램 가입에 대한 지지의사를 재확인하였음.
-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강력하게 언급했다고 말하고, 향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 한·미 정상회담 주요 쟁점과 회담 결과

주요 쟁점	회담 결과
북한 핵·미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자회담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 재확인</li> <li>· 6자회담 재개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마련 추진</li> <li>· ‘9.19 공동성명’ 조속 이행 추진</li> <li>· 미사일 발사 우려 및 유엔안보리 결의 1695호 평가</li> <li>· 다른 대북제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노 대통령)</li> <li>· 북핵 폐기 시 더 좋은 길이 있음(부시 대통령)</li> </ul>
한·미동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관계 발전(‘동맹의 현대화’)에 만족 표명</li> <li>· 한·미동맹 미래비전 설정과 이에 기초한 군사지휘관계 전환 로드맵 작성에 만족표명</li> <li>·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확인</li> </ul>
전시작전통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 원칙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 등 구체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li> </ul> </li> <li>·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됨</li> <li>· 주한미군 지속 주둔 및 유사시 미군 증원 확인</li> </ul>
한·미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관계 격상 공동인식 및 체결의지 재확인</li> <li>· 내용 중시하되 가급적 촉진하여 타결에 협력</li> </ul>
미국 비자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프로그램 조속 가입을 위한 미국 측 의지 확인</li> </ul>

※ 청와대 발표 및 주요 언론 보도 참고 작성

#### IV. 정책적 고려사항

-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9.19 공동성명' 발표 1주년이 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그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1695호)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가 우려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한·미 FTA 협정 체결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개최되었음.
- 한·미 정상은 북핵 및 미사일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FTA 협정 체결 문제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원칙적 틀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동 문제들의 해결 방향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입장을 분명히 하였음.
  -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으로써 유엔안보리 결의(1695호) 이행 상황에서도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결의 입장을 강화함.
  -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 원칙 합의로 동 문제는 향후 전환 시기, 방법, 단계 등에 관한 양국 실무진간의 구체적인 협의·결정의 문제로 귀결됨.
  - 한·미 FTA 체결의지 확인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국내적 찬·반 갈등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체결 자체에 대한 논란은 차단함.
- 그러나 원만한 합의로 끝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는바, 향후 주요 현안별로 합의의 내용들을 구체화하여 이행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함.
-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에 대한 개별적·산

발적 해석이나 언급을 자제함으로써 한·미간의 정치적 신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양국 정상 간의 합의의 정신과 이해의 공감대를 배경으로 정책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행하려는 노력이 중요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진행시키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며, 한·미 양국은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양국의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정책 조율을 해야 할 것임.

- 한·미 양국은 기존의 구체적 접근 및 대안의 차이를 각각 자기 측에 맞추려는 무리를 하기보다는 각각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정정책의 최대공약수를 찾는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미 정책 협의과정에서 한국은 한·미 양측의 입장에서 대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투영시킴.
- 이 과정에서 한국은 공식 또는 비공식 남북대화 창구를 적극 활용,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환경을 조성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 미국 행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미 의회에서도 대북제재 논의가 부상할 수 있는바, 한국은 이번 정상 회담에서 확약한대로 유엔안보리 결의 존중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의 조치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조치는 한국의 입장에서 먼저 판단하고, 서로의 차이를 좁히거나 상호 역할 수행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

-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환수(이양)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상 간 합의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및 자세를 경계함.
  - 정부·정치권은 물론 사회 제 세력 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정치적 목적 활용이나 정쟁도구화 중단
  - 한국의 안보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한·미동맹의 상호주의적(호혜적), 포괄적, 미래 지향적 발전 측면에서 조건, 시기, 단계 및 절차 등의 구체적 문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한·미 국방 당국 간 실무협의를 위한 우리 측의 구체적 대안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함.
  
-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 측에 의해 제시된 ‘동맹의 현대화’는 우리 측이 추진해온 ‘포괄적·역동적·호혜적 관계 발전’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지만, 주한미군 재배치·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행, 한·미 FTA 체결 등 제반 한·미관계의 발전을 고려한 포괄적 동맹 발전 구상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감.
  
- 한·미 FTA 협정 체결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양국의 적극적인 의지에 부응하도록 국내적으로 찬·반 세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수용하는 적극적인 사회적 협의의 장을 진행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도록 함.
  - 동시에 참여하게 부상한 국내정치·사회적 갈등을 완화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O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이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행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행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Ⅱ)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근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근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

##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통일정세분석 2006-09

---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 901-2527, 팩스 : 901-2543
인쇄처	도서출판 늘품 전화 : 2275-5326
인쇄일	2006년 9월 일
발행일	2006년 9월 일

---